

# “광주 쏠림 우려”…전남도의회, 행정통합 안전장치 촉구

교육·청사 배치 쟁점화…통합 특별시 명칭도  
놓여준 보호 장치 필요…TF팀 구성 대응키로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광주 쏠림과 지역 소외를 막을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 등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남도와 도의회는 19일 오후 도의회 초의실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도의회·집행부’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는 지난 8일 의원총회 설명회와 13일 제1차 간담회에 이은 도의회와의 세 번째 소통 행보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과 특별법안을 상세히 설명하고 도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실·국장, 김대중 전남교육감, 도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통합과 관련한 도의원들의 질의와 건의가 잇따랐다. 이광일 전남도의회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여수1)은 “전남이 확보할 재정 인센티브의 구체적인 총액과 산식, 시행 시점과 보장 기간을 명확히 제시해 달라”며 “지방교부세, 지방소비세 가중치 적용 기준과 배분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다.

신민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6)은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에 돌다리도 백 번, 천 번 두드리는 심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서울대 10

개 만들기 정책과 연계해 순천대·목포대 통합과 의대 설립이 전남에 남아 인재를 키우는 구조로 이어져야 한다”고 교육 분야 특례를 특별법에 반드시 담아줄 것을 요청했다.

강문성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3)은 “여수는 여천시와 여천군이 합쳐져 통합을 한 데 이어 대학도 여수대와 전남대가 통합을 한 바 있는데, 20~30년 지나고 보니,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대도시로 빨려가는 현상이 아주 심화됐다”면서 “청사가 들어온 곳은 상당히 발전했고, 기존 있던 데는 쇠퇴돼 향후 대책이 고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재정 인센티브는 총 20조원 이지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정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며 “4년 이후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어 “균형발전기금 설치에 광주 시와 합의했고 특별법에 특별로 반영하기로 했다”면서도 “기금 재원과 규모는 정부와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청사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청사 활용 원칙을 존중하되, 구체적인 조직과 기능 배치는 특별법 통과 이후 특별시 조례로 결정할 사안”이라며 “지금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19일 오후 전남도의회 초의실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전남도의회-집행부 간담회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남도

그었다.

교육분야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역 거점 국립대 위상 강화를 위한 특례 조항을 특별법에 넣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본격적인 간담회 앞서 김태균 의장은 “통합특별시의 명칭을 광주·전남특별시가 아닌 전남·광주특별시로 추진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의장은 “행정통합은 행정구역 통합이라는 가시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역사

성, 정체성, 상징성을 함께 담아내는 문제 이다”며 “전남, 광주 통합의 균형을 고려할때 명칭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 논의에 선제적, 체계적 대응을 위해 도의회 주도로 행정통합 대응 TF를 구성 운영 하겠다”며 “필요시에는 특별위원회로 전환해 보다 심층적이고 공식적인 의회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도의회 정영균(더불어민주당·순천1)·최동익(민주당·비례)·임형석(민주당·광양1) 의원은 이날 전남도의회 동부청사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 조건은 도농 균형발전”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행정통합 특별법에 △도농복합시 읍·면 특별회계 특례 신설 △지역발전 특별회계 시·군 자율계정의 50% 이상을 도농복합시 읍·면 지역 사업에 의무 사용

△도농복합시 읍·면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별도로 기자회견에 나선 박형대(진보당·장흥1) 의원도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지만 놓여준 축소 위기에 대한 대비는 현저히 부족하다”며 놓여준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현규 기자 gnews1@gwangnam.co.kr

## 난개발 우려·주민투표 요구 등 시·도민 질문 집중

교육 통합 문제 놓고 기대와 우려 교차

▶1면서 계속 공공기관 2차 이전, 대형 프로젝트 유치와 질문도 이어졌다.

영안에 어떤 기관을 유치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김 지사는 “정부 방침과 기관 성격에 따라 배치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며 “통합 이후에는 산업과 기관 배치 모두 지역 여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승희 군수는 “이미 유치 가능 기관을 검토해 왔다”며 중앙정부와 협의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국가 전략산업단지, 분산에너지 기반 산업 배치 가능성을 거론한 질문에는 “값싼 전력의 안정적 공급과 인근 산업단지 연계가 경쟁력”이라며 서남권 입지의 장점을 강조했다.

교육 통합에 대한 관심도 매우 뜨거웠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작은 학교 증가와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소멸로 이어지고 있다”며 “전남의 생태·문화 자원을 광주의 교육 인프라를 더해 교육 선택권을 넓히는 쪽으로 통합 논의를 끌고 가겠다”고 말했다.

‘광주 인프라가 좋아 전남 학생이 더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학부모 우려에는 “공동 교육과정과 공동 학군 등 이미 협력 모델을 확장하고 있다”며 “통합이 되면 투자 여력이 커져 예체능·진로교육까지 초·중고·대학으로 잇는 체계를 더 촘촘히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암군도 공공도서관, 체육·돌봄 인프라 확충 사례를 들며 “농촌 교육 경쟁력을 끌어올릴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같은 날 오후에는 광주시도 동구청 대

회의실에서 행정통합 공청회를 열어 시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청회에서는 통합과 관련한 다양한 질문이 쏟아졌다.

시민들이 느끼게 될 구제적 변화에 대한 질문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은 불이익 배제, 맞춤형 지원, 현 상태 유지를 기조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교통·주거 등 삶의 질 향상, 산업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고 답했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기초자치단체의 세재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시민은 “국세 중 지방세 성격과 갖고 있는 것은 지방세로 바뀌어 열악한 자치구의 재정이 개선될 것이다”며 “특별법 안에 지방교부세 및 통합 관련 재원의 일정 비율을 기초자치단체에 별도로 배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시장은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 시키는 게 안정적이겠지만, 연간 5

조원을 어떤 형태로 지원할지 정리가 안됐다”며 “이 내용을 특별법안에 담아야 광주에서의 통합의 의미를 찾을 것이며, 국회 입법 전에 논의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교육통합이 행정통합을 따라간다는 의견 대해 이경선 광주시교육감은 “교육자치는 헌법에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전문성을 보장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특별법에서도 제일 먼저 언급됐으며, 이는 교육자치를 보장하기 위한 선언적인 의미는 이보다 강력한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속고와 공론화 과정, 교육계 인사의견을 수렴하는지도 중요한다. 양 교육청에서 별도로 학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달 말까지 각 시·군·구를 순회하며 주민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갖고, 행정통합에 대한 시·도민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전남도, 여순사건 위령사업 전담팀 신설

위령·기념사업 전반…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총괄

전남도는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위령사업 전담팀을 19일 신설했다.

위령사업팀은 여순사건 관련 위령과 기념사업 전반을 전담하고, 국비 신규사업으로 확보한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 시험사업을 집중 담당한다.

국립전남트라우마치유센터는 여순사건 등 국가폭력으로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희생자·유족의 치유와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국비 6억원을 확보했고, 도비 6억원을 추경에 반영해 치유상담과 심리교육, 미술·음악·원예·여행 등 치유 프로그램, 물리·한방 치료와 신체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

이다.

전남도는 위령사업팀을 중심으로 유족을 위한 위령사업 기본계획 수립, 국비 확보, 추모공원 조성, 제단 설립,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건립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을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법에 따라 올해 10월 조사 완료, 내년 4월 진상조사보고서 확정이 예정돼 있어 위령사업을 전담할 체계적 조직이 필요하다”며 “여순사건의 완전한 진상규명,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이 조속히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 광주시의회, 행정통합 준비 조직 신설안 제동

“심도 있는 검토 필요”…증원·조직개편안 심사 보류

광주시가 행정통합과 공항 이전 등 현안 대응을 위해 마련한 조직개편안이 광주시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19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광주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실무를 전담할 ‘행정통합 실무준비단’과 ‘통합공항 미래도시본부’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담겼다.

공무원 정원 조정 조례안에는 시 공무원 정원을 38명 늘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행정통합 실무준비단 14명과 집행부 정원

31명, 소방공무원 7명 등 모두 37명을 증원하고, 2급 이사관인 시의회 사무처장과 4급 서기관인 담당관·전문위원 사이에 3급 직급을 신설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시의회 내부에서 반발이 일면서 조례안 심사와 의결에 제동이 걸렸다.

시의회는 3급 직급 신설에는 공감하지 만, 행정통합으로 의회 업무가 늘어난 데다 통합의회 출범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실무 라인 증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안건을 심사한 행정자치위원들은 “조직개편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의 사전 설명과 협의가 없었다”며 “행정통합에 대비해 시의회 공무원 정원도 2~3명 증원하



광주시의회는 19일 제340회 임시회를 열고 시가 제출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과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다.

겠다는 약속을 집행부가 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시의회의 정원 증원 요구에 대해 “통합 대상인 전남도의회 의원 증원 상황을 보거나, 통합 특별법 통과 이후에 검토하겠다”며 이점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결국 상임위 논의 결과 ‘심사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

안병한 행정자치위원장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심사를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이날 원포인트 임시회가 무산됨에 내부 논의를 거친 뒤 2월 임시회에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 ▶1면 ‘지방소멸’서 계속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절반 이상(54.6%)은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남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64.0%는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37.5%가 ‘기업 유치’를 꼽았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3차 연합이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방안을 말한다.

3차 연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 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응답 지자체 25.0%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차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채용보조금 등)(11.5%) 등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